

## 여성대통령 시대,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함.
- 본 조사는 2013.3.18~3.22에 걸쳐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지역 제외)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1,000명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감정책단 203명으로 구성되었음
-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정도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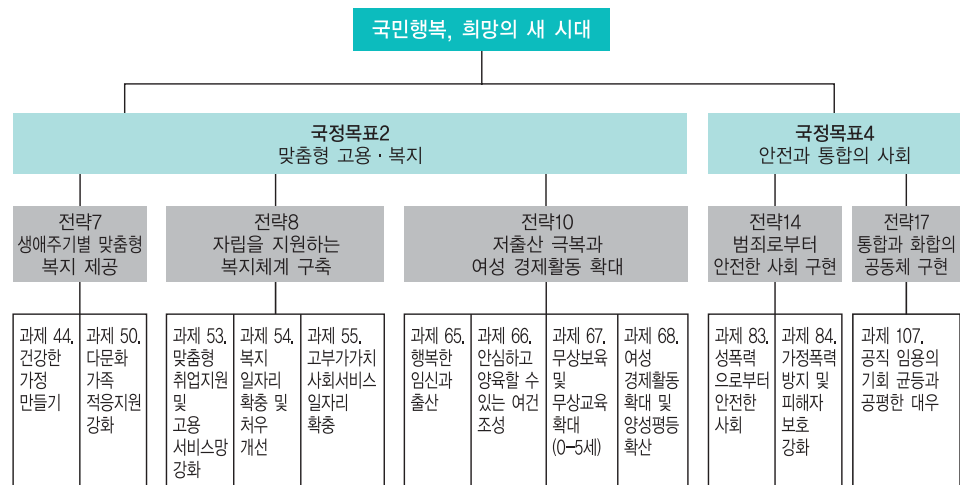
### I.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

#### 이슈 #1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국정과제는 성폭력/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 대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지만 하나 대체로 동의한다고(조금 동의함+매우 동의함 70.8%~98.3%) 응답하였음

〈그림 1〉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자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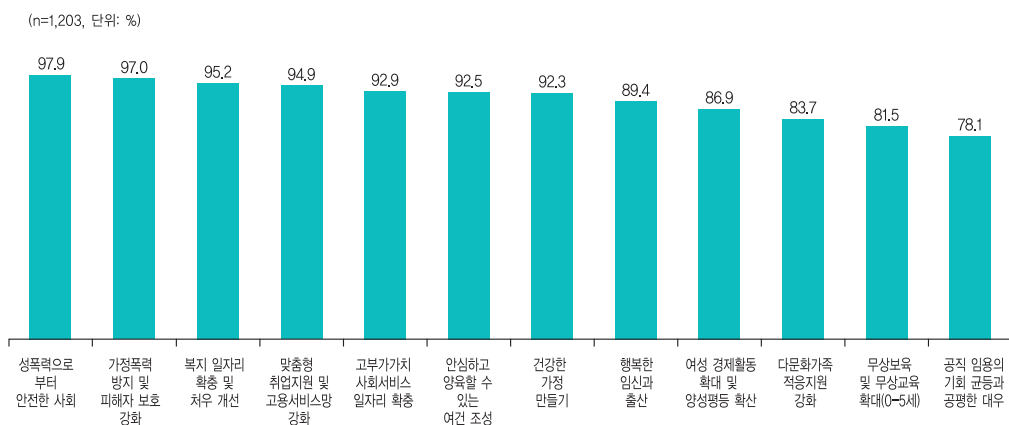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국정과제<sup>1)</sup>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97.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97%),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95.2%),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94.9%),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92.9%),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92.5%), '건강한 가정 만들기'(92.3%) 등이었음. <그림 2>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sup>2)</sup>(48.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9.1%), '복지 일자리 확충 및 개선'(35.1%),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서비스망 강화'(29.2%), '건강한 가정 만들기'(27.8%), '행복한 임신과 출산'(24.7%)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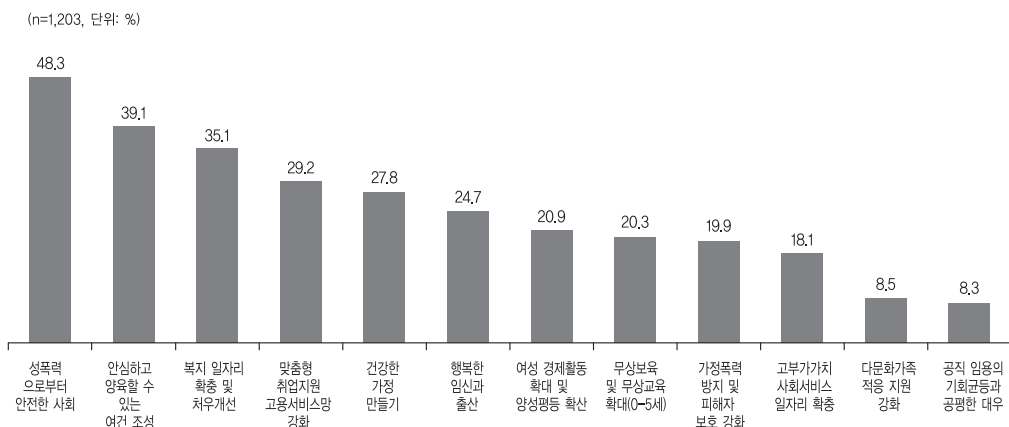
## 이슈 #2

### 남녀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분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남녀간 인식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여성 31.4% < 남성 10.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여성 16.7% < 남성 23.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여성 42.5% < 남성 35.7%),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여성 51.5% < 남성 45.1%), '행복한 임신과 출산'(여성 21.7% < 남성 27.6%), '건강한 가정 만들기'(여성 24.9% < 남성 30.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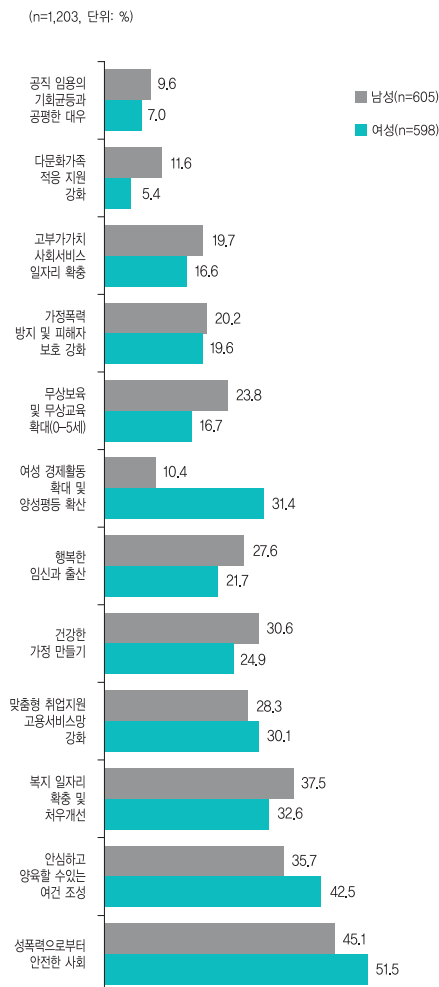
<그림 2>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동의정도



<그림 3>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1) 국정과제별 추진계획 각각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평균치를 구한 후 비교하였음.
- 2) SBS가 2013년 2월 20일~21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공약 중 가장 이행되기를 원하는 공약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이었음.

-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추진과제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는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순이었음
-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의 경우는 우선 추진과제로 인식하는 정도의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남성응답자 비율 보다 21%p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우선 추진 순위를 12개 과제 중 4번째라고 보았으나, 남성의 경우 하위권인 11번째라고 보았음.
-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 추진과제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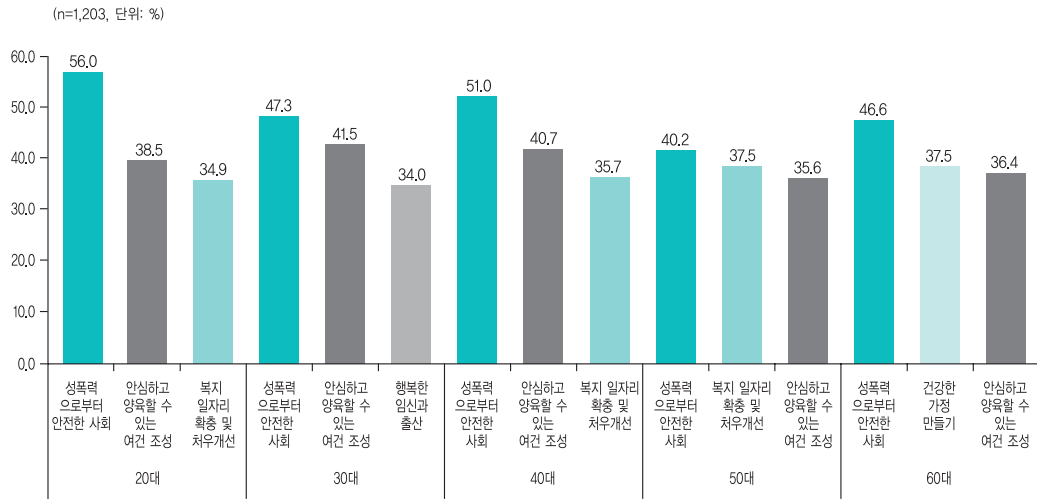


〈그림 4〉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성별

### 이슈 #3

**모든 연령대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최우선시, 20~40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50대 복지, 60대 건강 가정을 다음 우선 순위로**

- 전체 연령층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고 있으며, 20~40대는 치순위 우선 추진 과제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50대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60대 이상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꼽았음. 그 다음으로 20대와 40대는 각각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30대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50대와 60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꼽았음. (〈그림 5〉)
- 20대는 여타 연령대와 비교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56.0%), '행복한 임신과 출산' (32.6%)을 우선 추진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18.8%)는 가장 낮았음. 30대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 (34.0%),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1.5%),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30.3%)에 대한 우선 추진과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32.3%),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망 강화' (23.1%),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8.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13.9%)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여타 연령대와 비교시 가장 낮았음.
- 40대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23.6%)을 우선 추진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5.9%)를 우선 추진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았음.
- 50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23.1%),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10.2%)를 우선추진과제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여타 연령대와 비교시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0.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5.6%)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가장 낮았음.



〈그림 5〉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 - 연령별

- 60대 이상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37.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3.9%)을 우선추진과제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행복한 임신과 출산'(13.6%),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3.6%), '다문화가족 적응지원강화(6.8%)'를 우선 추진과제로 보는 응답자 비율은 가장 낮았음.

#### 이슈 #4

**여성은 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및 일·가정 양립을 가장 우선시, 20·30·50대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40·60대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다음 우선 순위로**

-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51.5%),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42.5%) 부문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5.4%),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7.0%) 등은 시급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3)</sup>(표 1))
- 20대 여성의 경우 여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우선 추진과제로 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0대 64.9%) 전 연령 평균치 51.5%), '행복한 임신과 출산'(20대 28.8%) 전 연령 평균치 21.7%에 대한 응답자비율은 가장 높았음. 30대 여성들은 여타 연령층에 비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0대 45.3%) 전 연령 평균치 42.5%),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30대 23.3%) 전 연령 평균치 16.7%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40대 여성들은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40대 35.6%) 전 연령 평균치 30.1%),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40대 33.8%) 전 연령 평균치 31.4%)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건강한 가정 만들기'(40대 29.4%) 전 연령 평균치 24.9%)는 타 연령대와 비교시 가장 높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40대 12.5% < 전 연령 평균치 21.7%)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40대 13.1% < 전 연령 평균치 16.7%)는 가장 낮았음.
- 50대 여성들은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50대 38.1%) 전 연령 평균치 32.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50대 26.9%) 전 연령 평균치 19.6%)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50대 43.3% < 전 연령 평균치 51.5%)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연령대 대비 가장 낮았음.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국정과제별로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한 여성응답자 비율(복수응답기준)임.

〈표 1〉 여성 연령대별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우선 추진 순위(중복응답)

	20대(총 111명)	30대(총 150명)	40대(총 160명)	50대(총 134명)	60대(총 43명)
1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64.9%)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8.7%)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52.5%)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3.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8.8%)
2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44.1%)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45.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42.5%)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8.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9.5%)
3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32.4%)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여성경제 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확산(각 30.0%)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35.6%)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31.9%)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 확산(각 37.2%)
4위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29.7%)	-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33.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31.3%)	-
5위	행복한 임신과 출산 (28.8%)	행복한 임신과 출산 (28.0%)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31.9%)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29.9%)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27.9%)

- 60대 이상은 20~30대 연령층에 비해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60대 37.2% > 전 연령 평균치 31.4%),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망 강화’(60대 37.2% > 전 연령 평균치 30.1%)를 우선 추진과제로 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 연령 평균치 28.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30대 10.4% < 전 연령 평균치 20.2%),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30대 5.6% < 전 연령 평균치 10.4%)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가장 낮았음.

## 이슈 #5

### 20~40대 남성들은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 50~60대 남성들은 건강한 가정을 가장 우선시

- 남성들의 경우 20~40대는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50~60대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중요시함.〈표 2〉)
- 연령대로 보면 20대 남성들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20대 36.4% > 전 연령 평균치 27.6%)을 우선시하는 응답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30대 남성들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30대 40.3% > 전 연령 평균치 27.6%),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30대 37.5% > 전 연령 평균치 23.8%)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았으나,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망 강화’(30대 22.2%

- 40대 남성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40대 49.7% > 전 연령 평균치 45.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40대 25.1% > 전 연령 평균치 20.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40대 39.1% > 전 연령 평균치 35.7%)을 우선추진과제로 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50대 남성은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50대 36.9% < 전 연령 평균치 45.1%)를 우선 추진과제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여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으며, 반면 ‘건강한 가정만들기’(50대 40.0% > 전 연령 평균치 30.6%),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망 강화’(50대 33.8% > 전 연령 평균치 28.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50대 23.8% > 전 연령 평균치 19.7%)을 우선 추진과제로 보는 응답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 남성 연령대별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우선 추진 순위(중복응답)

	20대(총 107명)	30대(총 144명)	40대(총 179명)	50대(총 130명)	60대(총 45명)
1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6.7%)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5.8%)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9.7%)	건강한 가정 만들기 (40.0%)	건강한 가정 만들기 (46.7%)
2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37.4%)	행복한 임신과 출산 (40.3%)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각 39.1%)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각 36.9%)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44.4%)
3위	행복한 임신과 출산 (36.4%)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각 37.5%)	-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42.2%)
4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2.7%)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28.5%)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33.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3.3%)
5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29.0%)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각 34.7%)	건강한 가정 만들기 (27.9%)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2.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28.9%)

## 이슈 #6

###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별 추진계획 우선 순위

-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국정과제	추진계획
과제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 가족가치 확산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과제 50.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	▶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일반 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 ▶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조정 강화 등 ▶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제 53.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반듯한 시간제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과제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가사간병, 노인돌봄 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과제 55. 고부가 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종사여건 개선- '가사 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과제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 맞춤형 임신, 출산비용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지원 ▶ 임신 분만취약지의료지원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다자녀 지원 ▶ 일터에서의 임신, 출산 지원 강화 ▶ 출산정책거버넌스 구축

국정과제	추진계획
과제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맞춤형 보육 서비스 ▶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 돌봄 서비스 확대 ▶ 학교내 돌봄강화 ▶ 문화예술 돌봄 교육 활성화
과제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 0~5세 보육 국가원전 책임제 실현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과제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 ▶ 부문별, 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과제 83. 성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 체계 확립 ▶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과제 8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인권보호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강화
과제 107.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대우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자료 : 제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는 '취약가족의 가족 기능 확보 및 자립강화'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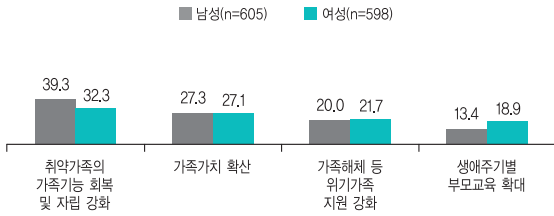
-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는 남녀모두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가족가치 확산', '가족 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추가 의견으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가족간 대화하기 혹은 건강가족 만들기 위한 캠페인 등이 제시되었음

(n=1,2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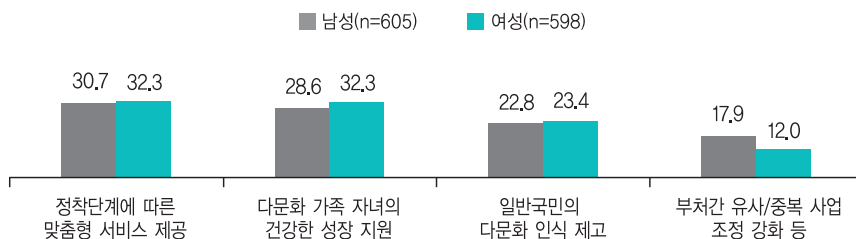


〈그림 6〉 건강한 가정 만들기  
- 가장 시급한 추진계획(성별)

#### ☞ '다문화가족 적응지원강화'를 위해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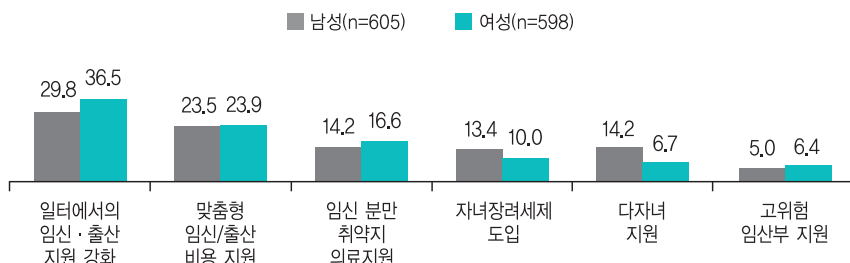
-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 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는 남녀모두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인식제고',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조정 강화'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금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그림 7〉)

(n=1,203, 단위: %)



〈그림 7〉 다문화가족 적응지원강화 - 가장 시급한 추진 계획(성별)

(n=1,203, 단위: %)



〈그림 8〉 행복한 임신과 출산 - 가장 시급한 추진계획(성별)

-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 를 위한 추가 의견으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200건 이상),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국제결혼에 대한 감독 강화, 다문화가족간 혹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간 교류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

#### ☞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임신·출산지원 강화'가 우선

- '행복한 임신과 출산'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계획에 대해서 여성은 '일터에서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임신 분만 취약지 의료 지원', '자녀장려세제 도입', '다자녀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도 우선 순위는 비슷하였음.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바라는 응답자 비율(60.4%)이 남성(53.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난임·불임시술 및 산전·산후 검사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 확대, 농어촌 지역 공공 산부인과 확대, 미혼모·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8〉)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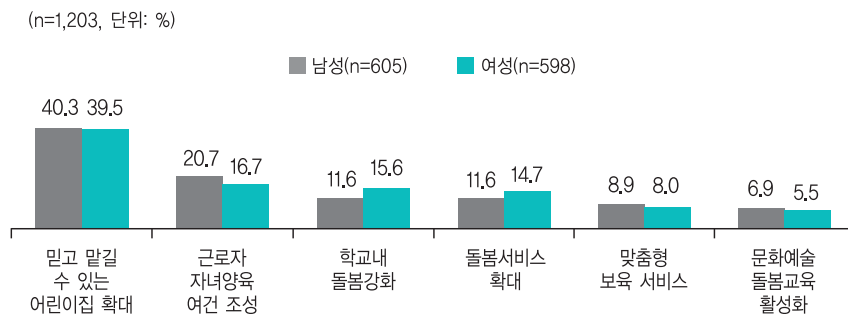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는 남녀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학교내 돌봄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문화 예술 돌봄 교육 활성화' 순으로 응답하였음.(그림 9)
-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 수 확충, 친인척 양육서비스 제도 도입, 남성 자녀양육 참여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음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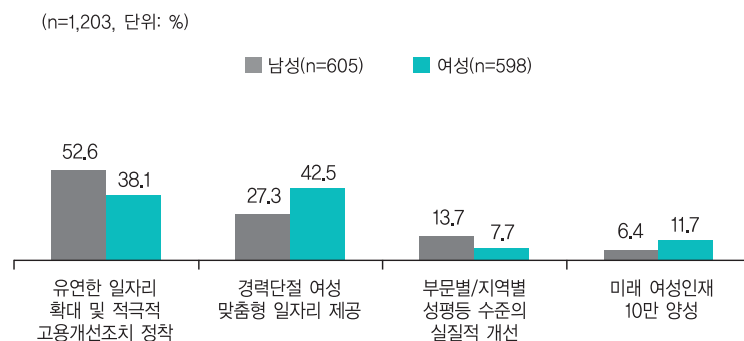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계획으로는 여성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정착', '미래여성 인재 10만 양성',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순이라고 응답하였음. 대다수 여성들은 여성 인재 양성, 성평등 수준의 향상 보다는 일자리 확보, 고용상 차별 개선 등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짐.(그림 10))

- 남성은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정착',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순으로 응답하였음
- 남녀 모두 일자리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양성평등의 실질적 개선 및 여성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것으로 보임.
- 추가 의견으로는 양성평등 인식 교육, 남성에 대한 역할 분담지, 전문직 고임금 여성 일자리 창출, 임신 및 출산 기간의 경력 인정, 채용시 연령 차별 철폐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9〉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가장 시급한 추진계획(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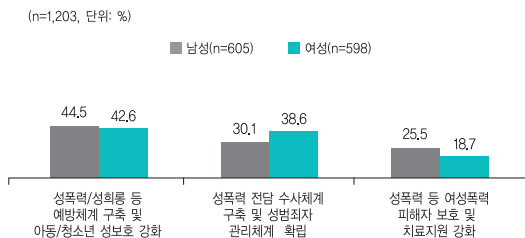


〈그림 10〉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가장 시급한 추진 계획(성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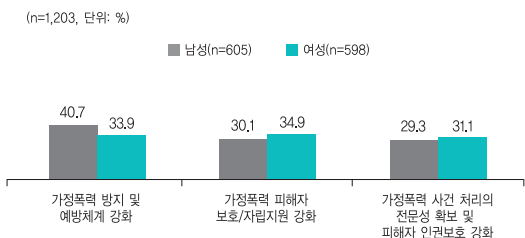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순으로 응답하였음.
- 추가 의견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그림 11〉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가장 시급한 추진 계획(성별)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립지원 강화'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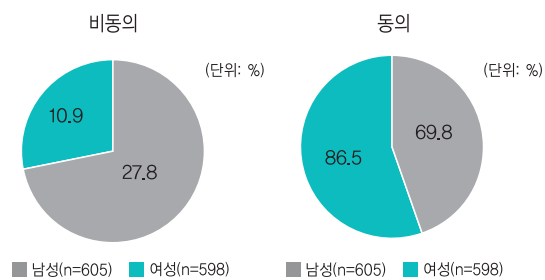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는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립지원 강화',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순으로 응답하였고, 남성은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음.
- 추가의견으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등이 제시되었음.



〈그림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장 시급한 추진 계획(성별)

☞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여성 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아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은 86.5%, 남성은 69.8%로, 약 16%p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연령대별 동의정도를 보면 20대 72.5%, 30대 75.5%, 40대 78.2%, 50대 83.7%, 60대 83.0%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추가의견으로는 학력, 경력, 연령,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그림 13〉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성별)

☞ 여타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 관련 제안

-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에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 교육 실시, 국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다양한 경로의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취업 프로그램 강화 및 연계, 기업체와 구직자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이 제시되었음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차우개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에는 복지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실현,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변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업의식 교육 등이 있었음.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추가 의견으로는 사회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청년·고령인력 활용 방안 모색,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할 부서 통합 등이 제시되었음.

## 이슈 #7

### 소결

- 본 조사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 대체로 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을 최우선 추진국정과제로 보고 있으며, 다만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순위 우선추진과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조사결과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성별과 무관하게 거의 전체 연령층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임.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 및 수사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하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남녀간 인식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 경제활동 및 양성평등 확산' 분야 임.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경제활동 및 양성평등 확산' 이 우선 추진 국정과제 순위에서 상위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하위로 나타남. 반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식차이를 보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어린이집 설치 확대, 근로자의 자녀양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셋째, 성폭력 이슈가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사회적 이슈이긴 하나, 연령층에 따라 관심분야 혹은 우선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는 다르게 나타남. 20~30대는 임신,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반면, 40대 이상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음.
- 넷째, 남성의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50~60대 남성의 경우는 '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 보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20~40대 남성은 '성폭력으로 부터의 안전'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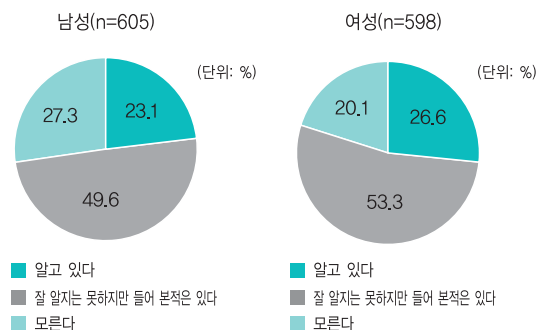
- 다섯째,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강화'와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부문은 국정과제 우선 추진 순위에서 뒤로 밀려 남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과 여성대표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지도

### 이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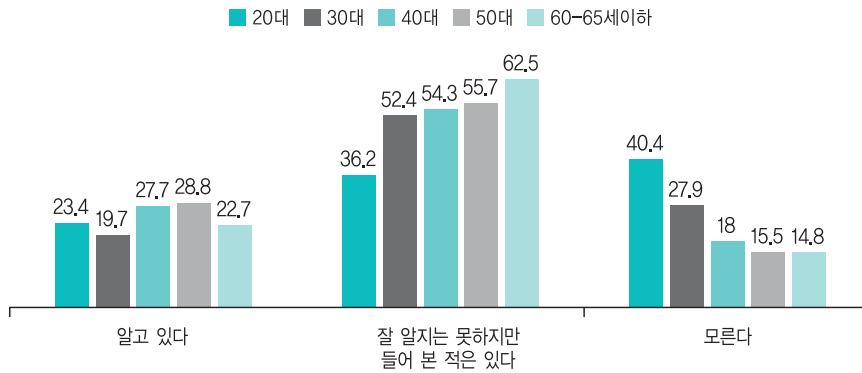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76.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인지도, 주요 인지경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3%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알고 있다’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여성 79.9% > 남성 72.7%).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알고 있다’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낮음. 20대의 경우 ‘모른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4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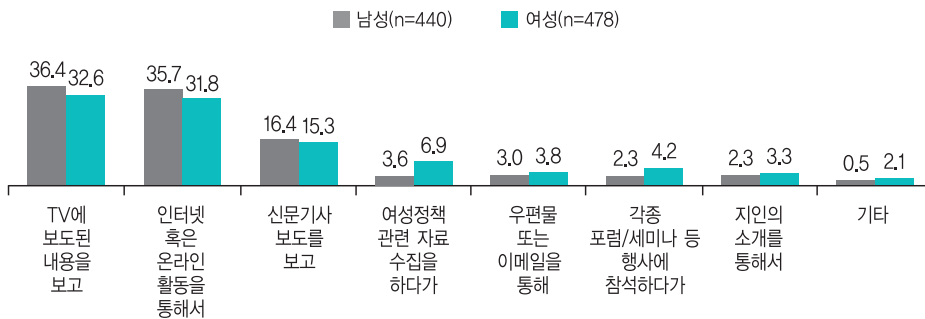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지도 - 성별

(n=1,203, 단위: %)



〈그림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지도 - 연령별

(n=9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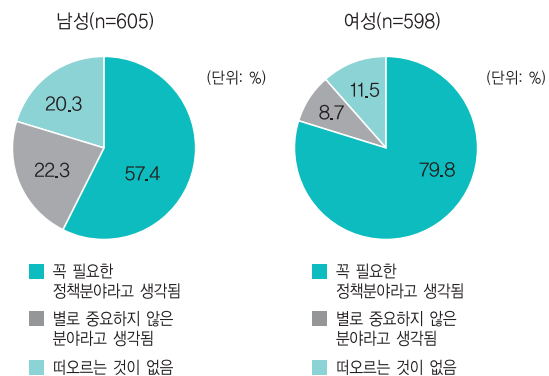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지 경로 - 성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경우,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TV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인터넷 혹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신문기사 보도를 보고’ 등의 순이었음.(〈그림 16〉)

## 이슈 #9

### ‘여성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분야’, 여성 79.8% 남성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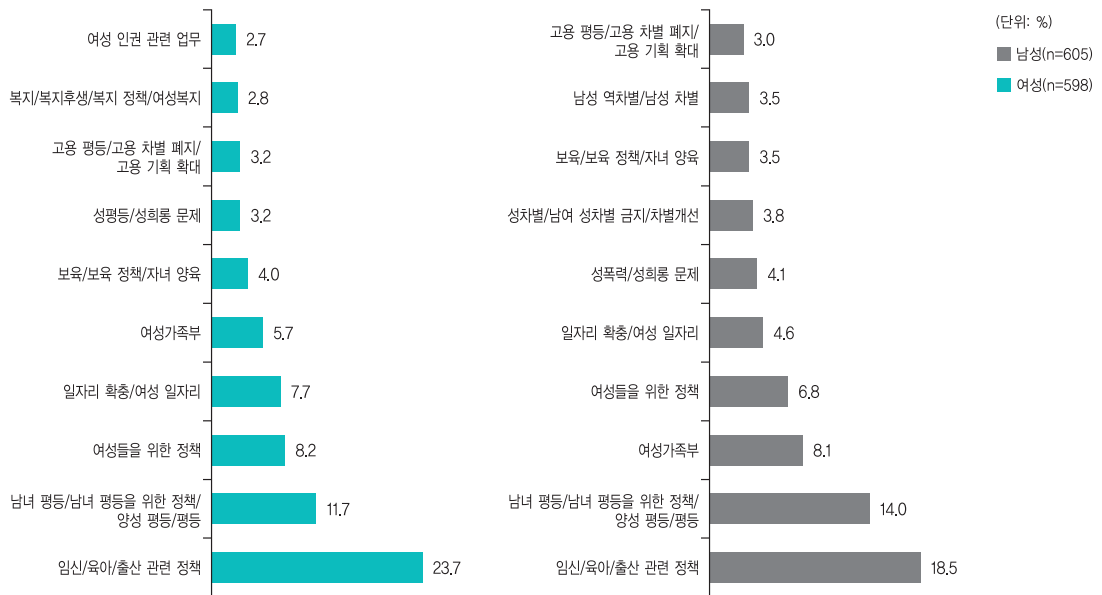
-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 분야’라는 응답이 68.5%로 나타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15.5%)라는 응답보다 약 4.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꼭 필요한 정책분야’라는 응답(여성 79.8% > 남성 57.4%)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여성 8.7% < 남성 22.3%)라는 응답의 경우 모두 남녀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 - 성별

-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녀의 경우 모두 ‘임신/육아/출산 관련 정책’, ‘남녀 평등/남녀 평등을 위한 정책/양성 평등/평등’, ‘여성들을 위한 정책’, ‘여성가족부’, ‘일자리 확충/여성 일자리’, ‘보육’, ‘성폭력’ 등으로 응답하였음. 일부 남성의 경우 ‘남성역차별/남성차별’이라고 응답함.

(집필 : 김정미 연구원)



〈그림 18〉 '여성정책'이 상기하는 이미지 10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전(1983) 한국여성을 둘러싼 국내외 여성동향을 돌아봄.

국내	여성	국제
<p>2.3 법무부, 과실범 별도수용을 위한 개방교도소와 여자교도소 설치 결정</p> <p>3.2 중·고교생 복장 자율화 실시</p> <p>4.28 보사부, 인구억제를 위해 세 자녀부터 의료보험 추가부담 적용 추진</p> <p>6.30 KBS 이산가족 찾기 전국 TV 생방송 시작</p> <p>10.9 버마 이웅산묘소 폭탄테러 사고 발생</p>	<p>1.14 한국 전기 통신공사 교환원 김영희, 정년무효 소송(여성전화교환원의 정년이 12년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됨, 한국 최초의 성차별 소송)</p> <p>3.14 '한국여성개발원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1071호)</p> <p>4.21 한국여성개발원 설립(원장 김영정)</p> <p>6.18 여성평우회('여평') 창립</p> <p>7.27 보사부, 2자녀 갖기 운동을 2자녀 이하 갖기 운동으로 바꾸고 3자녀 이상시 주민세, 의보료 추가부담 결정</p> <p>8.3 정부와 여당, '친족상속법' 개정 등 남녀평등 점진적 제도화 발표</p> <p>11.1 문교부, 신설예정인 53개 중고교에 남녀공학 적극 권장방침</p> <p>128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대통령령 제11270호)</p>	<p>5.25 정부,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12월 18일 국회 비준동의, 12월 27일 사무총장 비준서 기탁, 1985년 1월 26일 정식가입국 인정)</p> <p>10.5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 1983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p> <p>12. 대통령령에 의해 발족한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참가 준비</p>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I)』, 별책 한국여성사 주요 연표(1945.8.15.~2011.12.31.)